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해설>

편향된 서술 드러나 반대 여론 커질 듯

대한민국 임시정부 범통 부정·박정희 정권 성과 강조·친일파의 친일 행적 축소 등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내 공개했다.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축소하는 등 편향된 서술이 드러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 부분 공정성 논란 격화 불가피

국정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무장독립운동 축소,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 ▲임시정부 범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 미화, ▲박정희의 혁명 공약, 경제 정책 등 미화 설명, ▲박정희 정권 독재 정당화, ▲재벌 미화, ▲위안부 학살을 은폐·축소,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 관계 왜곡, ▲노태우 정권을 민주정부의 반열로 승격 등의 문제점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서의 228쪽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살을 숨기고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적시돼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전 교회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통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과대 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고 질타했다.

▲편향된 역사관 가진 집필진 1... 뉴라이트계열 많아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철통보안'을 유지했던 집필진 명단도 28일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됐다.

국내 대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꾸려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친(親)정부, 관련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공개한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31명이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

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중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에 대해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2명 역시 교회사 교과서 찬성자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이진식 장관 해임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국회 출석 금지와 해임추진,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이 나왔다. 모두가 우려했던대로 친일파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역사교과서 문제점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

전북교육청은 해당 검토본을 현재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을 중심으로 3~4일 내에 검토를 거쳐 총론적인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보조교재 집필진들이 시대별 검토를 거쳐 국정 역사교과서 전반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와 상관없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작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고향의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안승덕 오사카 전북도민회장, 도에 300만원 기부

안승덕 오사카 전북도민회장(81)이 지난 25일 전북도를 찾아 고향발전전에 써달라며 300만원을 기부했다.

부친 고향인 남원인 안 회장은 지난 2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에게 연말을 맞아 전북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먼저 밝혔으며, 면담 후 곧바로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만원을 선뜻 기탁했다.

안 회장의 기부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내 어려운 이웃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 오사카 전북도민회장(1997년 창립, 회원 300여명)을 맡고 있는 안승덕 회장은 아버지의 고향인 전북을 매년 방문할 정도로 고향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전북도와 일본 간 국제교류 등 도정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 회장은 오사카 식품박람회, 부품소재 투자유치 설명회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도정 관련 행사에서 바이어 및 기업 소개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으며, 재일 전북 고향방문단 추진의 일환으로 오사카 도민회 전북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민형 기자

박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시... 2018년 초 유죄 확정 가능성

정치권 인콰의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4월로 못 박은 것은 정치권이 주장해온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원로들은 동시에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총리 후보 추천과 재임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했다.

원로들의 주문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하야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남은 5개월 사이 총리 선출 과정과 개헌 논의까지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원로들의 주장은 박 대통령이 자진 해서 물러나는 방식을 권유했다.

정치권 일정부로 다음달에는 특검 시작과 함께 탄핵 과정이 동시에 진

행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개시된다.

지난 22일 발효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법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특검 수사는 최장 120일이 소요돼 내년 4월이 된다. 원로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 시점의 미지노선을 내년 4월로 정한 것도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검찰도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는만큼 특검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은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하야를 하게되면 자연인 신분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설 가능성이 크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에 따라 재판기간이 달라진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기급씩 2개월 안에 1심을 마치도록 돼 있다.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사실이 많거나 피고인 자체가 많은 경우 충분한 심리를 위해 하나의 혐의별로 2개월 정도씩의 심리를 거쳐 심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3심 역시 기본적으로 2개월씩의 심리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4월 하야 선언을 할 경우 특검에 의해 내년 4월 기소가 돼 1~3심을 치러야 한다. 이르면 2018년 2월께 유죄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다 구속을 시키는게 원칙인데 박 대통령의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가뭇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관영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역할 간담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긴급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헌법에 대통령 권위 및 사고시에 국무총리 등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한다 고만 돼 있을 뿐 하위 법률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제 6간담회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 탄핵 이후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민 의원은 "대통령의 권

한대행에 관련된 직무범위나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선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으로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민약 탄핵안이 통과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현실이 된다"면서 "국회가 서둘러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뢰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